

## 최순실에게 ‘뺨 뜯긴’ 재벌, 피해자인가?

/ 조해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최순실이 전격 체포되고 ‘문고리 3인방’이 떠났다. 박근혜 대통령 혼자 청와대에 남았다. 머리와 수족을 모두 잘린 채로 말이다. 이제 ‘죽은 권력’이나 다름없다. 그래서일까? 고립무원의 대통령은 며칠째 칩거 중이다. 격주로 월요일에 대통령이 주재하던 수석비서관회의가 지난 10월 20일 이후로 열리지 않았고 11월 1일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다.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 회사였다면 징계감이다. 아니면 혼자서는 이 나라를 통치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일까? 설상가상으로 이번 주에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5%가 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사실상 ‘죽은 권력’을

향해 국민들이 보내는 메시지도 매우 분명하다.

## 재벌, 얼마를 뜯겼는가?

박근혜 정권을 하루아침에 죽은 권력으로 만들어 버린 ‘최순실 게이트’, 그 시작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비리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시차를 두고 연이어 두 재단의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10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3개월 사이에 재벌 기업들로부터 약 800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전경련을 앞세워 마치 조폭처럼 ‘뺑 뜯기’를 했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먼저 강제 모금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들여다보자. 최순실 게이트의 발단이 된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에 낸 기부금 내역을 보면, 3대 재벌의 경우에는 그룹당 100억원이 훌쩍 넘는다. 가장 많은 돈을 낸 곳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제일기획, 에스원 등 6개 계열사들이 동원되어 총 179억원을 기부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르재단에 68억원, K스포츠재단에 43억원을 기부해 총 111억원을 냈다. SK그룹은 SK가 68억원을 냈고, SK텔레콤과 SK종합화학이 각각 21억5천만원씩 내서 현대자동차그룹과 똑같이 111억원을 냈다. 범 LG그룹은 LG, GS, LS가 총 74억원을, 롯데그룹은 롯데면세점과 롯데케미칼을 통해 45억원을 냈다.

그런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경우에는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수혜자라는 이유로 나라가 뒤집어졌지만, 재벌 기업을 상

대로 강제 모금을 한 것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걸핏하면 정부가 계획한 사업에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자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박근혜 정부의 권력형 재단 설립 및 모금 현황 자료」라는 보고서를 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 주도로 총 6개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대기업이 출연한 액수가 총 2,164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미르재단 486억원, 케이스포츠재단 288억원, 청년희망재단 880억원, 지능정보기술연구원 210억원, 중소기업인희망재단 100억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0억원이다.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은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 지난 7월 설립되었다. 3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끌면서 인공지능 열풍이 불자 박 대통령이 인공지능 연구를 지시했다. 예정에 없던, 느닷없이 떨어진 지시였던지라 준비된 예산이 없었다. 그러자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총대를 메고 나서서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등 7개 기업으로부터 30억원씩 모두 210억원을 거뒀다. 중소기업인희망재단(100억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200억원)에 들어간 출연금은 네이버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왜 네이버가 두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냈을까? 네이버는 2014년 시장 지배적 지위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1,00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된다. 이들 재단의 출연금은 여기서 나왔다. 벌을 받는 대신 돈으로 때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벌인 강제 모금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창조경제센터와 관련된 편

드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17개 기업이 동원되었는데, 기업들이 투입한 자금 내역을 보면 투자 3,487억원, 용자 3,440억원, 보증 260억원으로 총 7,227억원에 이른다. 민주당 자료와 합하면 약 1조원가량 된다. 청년고용 문제 해결이나 혁신기업 창업 지원 등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재벌 기업들의 자금을 동원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돈은 재벌 기업들이 냈는데 생색은 정부가 낸다.

대통령들도 어찌지 못한 재벌, 최순실 앞에서는 순한 양?

이렇게 재벌 기업들이 강제 모금에 동원되기를 밥 먹듯이 하다 보니 박근혜 정부에서 재벌들은 ‘봉’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재벌 기업 강제 모금과 관련한 보도들을 보면 하나같이 재벌 기업들이 ‘을’의 처지가 되어 정부와 청와대를 등에 업은 비선 실세의 ‘갑질’을 당했다고 한다. 재벌 머리꼭대기에 올라앉을 정도로 비선 실세의 힘이 대단했다며 난리를 친다. 재벌들이 조폭 권력 앞에 선 무력한 피해자로 그려지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과거에 대통령들도 어찌하지 못했던 재벌이라는 권력이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 앞에서 갑자기 순한 양이 되었다는 것인가?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강제 모금에 사용하는 방법이 유난스럽다는 점은 인정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최순실 측근이나 공직을 가진 부역자들이 벌인 일들을 보면 조폭과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조폭들의 무기는 직접

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인 데 반해 이들은 국가 공권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조세 징수권, 검찰 수사권, 감찰권, 공기업 인사권, 사면권 등등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유별났던 것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총수를 구속함으로써 재벌 기업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가거나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라는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며 위협을 가해 궁지에 몰아넣고 나서 돈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은 잠시 순한 양으로 변한다.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 병을 주고 말을 잘 들으면 마찬가지로 공권력을 남용해 약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재벌을 상대로 병 주고 약 주고 한 것은 아니다. 정부에게 그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은 재벌 기업들 자신이다. 비자금 조성, 탈세뿐만 아니라 ‘갑질’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총수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 정부는 재벌의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현 CJ 회장, 최태원 SK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사면 문제가 걸려 있었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신동주, 신동빈 일가가 구속은 면했지만 모두 기소가 되었고 신영자 씨는 구속되었다. 삼성그룹의 경우 이재용의 승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재벌들이 순한 양 행세를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모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놓고 재벌 기업들이 피해자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보수 언론들까지 나서서 ‘대기업 뺨 뜯기’라며 난리지만 재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다.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제 모금에 낸 돈은 재벌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푼돈에 불과하다. 푼돈을 내고 그보다 더 큰 것을 돌려받기 때문에 재벌한테는 엄청 남는 장사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 기업들이 누리는 온갖 특혜들을 생각해 보면 왜 재벌들에게는 남는 장사인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 최순실을 도와주는 것이 남는 장사다

한국에서 재벌이 누리는 특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치외법권’이라는 특권이고, 다른 하나는 재벌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 제도, 정책의 특혜다.

먼저 치외법권을 보자. 한국에서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지 않다. 재벌 총수와 재벌 기업들은 그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나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죄값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특권을 유지하려면 그 대가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이다. 재벌이 사정의 칼날에 내몰릴 때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면 그 칼날을 피해 갈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쉬운 쪽은 정부가 아니라 재벌 기업들이다.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권력 실세에 줄을 대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한국에서는 권력 실세를 통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총수가 직접 연루된 경우에는 액수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재판에 회부된 재벌 총수를 구해 내는 것은 재벌 기업에게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를 갖는다. 이렇게 정부는 재벌들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고 재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권력 실세를 이용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 대한승마협회를 매개로 한 재벌과 최순실 사이의 거래 관계를 보자. 재벌 기업들은 최순실이 권력 실세라는 걸 진작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삼성의 정보력은 국정원보다 뛰어나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닌 만큼 최순실이 권력 실세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 2012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승마협회 회장사는 한화그룹이 맡았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아들이 승마 선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이 시기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는 승마 선수로 활동을 시작해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김승연 회장의 셋째아들과 함께 승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땀다. 이 시기는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 재판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때다. 2012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2012년 8월 법정에서 구속되었고 2014년 2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다. 정유라가 국가대표로 선발됐을 때 비선 실세 논란이 일어났다. 국가대표가 되기에는 실력이 부족한 정유라 씨가 특혜를 받아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는 “공주 승마”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당시는 최순실이 아니라 정윤희가 비선 실세로 지목을 받았

었다. 무협의로 그냥 정리가 되었고 승마협회장을 맡은 한화 측 인사가 임기가 2년이 남았는데도 2014년 4월 사퇴를 한다. 김승연 회장 석방 직후 한화가 승마협회에서 손을 뗀 것이다. 시기가 공교롭게도 겹친다. 결과만 보면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을 감옥에서 구해 냈고 최순실은 딸 정유라를 승마 국가대표로 만들어 단체 금메달을 따고 이 기록으로 이대에 특혜 입학시키는 데 성공했다. 최순실은 최순실대로 원하는 것을 얻은 셈이다. 승마협회의 회장사가 한화에서 삼성으로 넘어간 것, 그것도 삼성그룹의 핵심사인 삼성전자가 회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는데, 어쨌든 이후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한국과 독일에서 최순실과 정유라의 승마 관련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 것이 드러났다.

재벌이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재벌이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재벌들이 순순히 돈을 내놓은 것은 모금을 거부했을 때 후환이 두려워서였을 것이다. 어떤 후환이 무서웠을까를 생각해 보자. 정부 말을 안 들었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리던 특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즉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죄를 지은 재벌 총수가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보험 들 듯 미리 그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재벌들이 두려워하는 피해는 보통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가 자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재벌이 당하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은 바로 공정한 법 집행이다. 피해가 아닌 것이다. 재벌이 피해자가 아닌 이유는 명백하

다. 자신들의 특권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특권을 통해 얻는 이익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벌이 누리는 두 번째 유형의 대표적 특권인 세금 감면 혜택을 감안하면 합법적인 정책적 특혜로 얻는 실질적 이득도 엄청나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보수 정권답게 재벌 기업에게 감세라는 값진 선물을 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유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고,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 증세를 커녕 이명박 정부가 취한 감세를 원상회복할 생각조차 없다고 뜻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상위 10대 재벌 그룹이 누린 법인세 감면 혜택은 10조5천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 상위 10대 재벌 그룹이 누린 법인세 감면 혜택 총 10조6천억원과 거의 맞먹는 액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창조경제센터 비용까지 모두 합쳐서 동원된 모금액이 1조원 정도다. 3년 동안 10대 기업이 누린 세금 감면 혜택 10조원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재벌들 입장에서는 비공식적인 준조세 1조원은 쥐도 아깝지 않은 데다가 그 액수도 우스운 수준이다. 실제로 세제 혜택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라는 면에서 기업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의 비중, 즉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실질적으로 낸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김대중 정부 27.2%에서 노무현 정부 23%, 이명박 정부 20%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8%로 내려갔다. 이렇게 법인세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소득은 늘어나지만 조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1조원 정도의 준조세는 법인세 증세가 없다는 정부의 약속과 충분히 맞바꿀 만하다. 비공식적인 준조세 방식이 양쪽에 훨씬 더 편리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예산과는 달리 투명성이 전혀 없어 은밀한 거래를 할 수 있고 국회의 감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선 실세에게 당하던 시절이 오히려 풍족하고 행복했다

재벌에 대한 강제 모금은 한국의 정치권력과 자본이라는 권력이 주고받는 이권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듯이 재벌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남는 장사다. 최순실이 직접 개입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승마협회를 통해 정유라가 누린 특혜 지원은 정부와 재벌 사이에 이러한 이권 거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준조세 징수는 마치 자기 돈인 양 당당하게 ‘뽕 뜯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유별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가 씨를 뿌려 재벌을 키웠으니 그 과실을 자신이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계산속이 빠른 재벌의 입장에서조차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성의를 표시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박 대통령에게는 안타깝게도 과실로 배를 채우기 전에 정권이 벼랑 아래로 떨어져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아 버리고 1970년대를 상상 속에서 불러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재벌들에게는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사라지고 이를 비호했던 박근혜 정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편치 않을 것이다. 비선 실세의 ‘뺨 뜯기’에서 해방됐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심적으로 매우 괴로울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었던 온갖 재벌 특혜 법안들이 줄줄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노동법 개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의료, 해양레저, 산악비즈니스 등 신산업 육성 방안 등 재벌에게 약속한 엄청난 선물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 농단을 할 때가 아니라 최순실 국정 농단이 끝장나면서 재벌들의 피해가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조교**